‘후백제역사문화센터’ 전주에 들어선다

교동 낙수정 일원에 2030년까지 국비 450억원 투입 건립 예정

후백제의 왕도(王都)인 전주에 후백제 관련 역사 문화를 조사·연구하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가 들어선다.

시는 올해 국가유산청(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실시한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보지 공모’에서 전주시 완산구 교동 낙수정 일원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030년까지 국비 450억을 투입해 건립할 예정인 후백제역사문화센터는 후삼국시대 한반도의 주도권을 두고 고려와 경쟁했던 후백제의 역사와 흔적을 조사·연구하고, 그 성과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공유하는 중요한 거점 연구문화시설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4개 기초자치단체가 응모했으며, 시는 서면 심사와 사전평가, 현장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건립 후보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실제로 후백제 왕도인 전주는 그동안 후백제역사문화센터의 건립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조감도

이는 견훤왕이 전주를 도읍으로 정하고 ‘백제’ 건국을 선포해 37년간 통치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와 ‘고려사’, ‘동국여지승람’ 등 다양한 문헌에서 확인되고, 사적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동고산성과 도성벽 유적, 건물지, 사찰 터 등 후백제 관련 유적이 도시 곳곳에 산재해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백제역사문화센터가 들어설 낙수정 부지의 경우 동고산성과 후백제 도성벽, 후백제 왕실 사찰로 추정되는 낙수정사지와 우아동사지가 인접해 있어 후백제 역사 문화를 심도있게 연구할 수 있는 장소이자, 전주한옥마을 및 전주시내권과도 인접해있고 녹지에 둘러싸여 있어 문화시설이 들어설 최적지로 평가를 받았다.

시는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에 발맞춰 연결도로 확장과 역사공원 조성 등을 통해 부지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동시에 낙수정 새뜰마을 도시재생사업과 승암산 인문자연경관 탐방로 조성사업 등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들과 연계해 후백제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한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인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후백제의 역사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 온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김윤덕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 전주시민의 힘이 더해져 이번 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전북도를 비롯한 후백제의 전 영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함께 후백제의 역사 문화를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건립될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금암1·2동 행정구역 통폐합 추진

전주시, 주민 여론조사 결과 76.3% 찬성… 이달 말 입법예고

전주시가 인구 1만 명 미만의 소규모 행정동인 금암1·2동에 대한 행정구역 통폐합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시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자치연구소(대표 손정민)에 의뢰해 지난 7월 5일부터 23일까지 만 19세 이상 금암1·2동 주민 7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7%p) 결과, 응답자의 76.3%가 금암1·2동 통폐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청사신축시까지 쓸 통합동 임시청사로는 현 금암1동 청사 55.9%, 금암2동 청사 44.1%로 금암1동 청사가 다소 우세했으며, 통합동의 명칭은 ‘금암동’이 92.8%로 조사돼 주민 대부분이 금암동의 명칭 사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사 신축 외 필요 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 우선 추진(37.9%)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25.4%) △주민자치프로그램 지원 확대(20.7%) △동청사 주민편의시설 활용(11.5%) △주민화합행사 지원(2.8%) 순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통합 의사를 확인한 만큼, 통합의 첫 단계로 이달 중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주민대표와 행정, 시의원 등이 참여한 협의체로, 통합동 임시청사 소재지와 신청사 부지, 통합 관련 제반사항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시는 오는 10월 입법예고와 12월 조례 개정, 내년 1~2월 통합 시행 준비(주민홍보, 인계인수 등)를 거쳐 내년 3월 통합 행정동인 금암동을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금암1·2동 통폐합을 통해 행정효율성이 높아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신청사 부지와 잔여 청사 활용방안 등에 대해 통합추진위원회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통합신청사를 오는 2028년 하반기까지 준공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금암1동과 금암2동의 인구는 각각 8041명과 9449명으로, 통폐합 시 금암동의 인구는 1만7490명으로 34개 동 중 인구수 13위 규모의 행정동이 된다.

/김옥기 기자

효자4동 통장협의회, 환경정화활동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통장협의회(회장 조재희)에서는 11일 통장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원, 주택가, 분리수거함 주변 취약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화활동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통장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무단 투기된 생활 쓰레기와 불법 광고물 등을 정비했다.

또한, 이날 단독주택, 원룸, 상가 등을 찾아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도 전개했다.

조재희 효자4동 통장협의회장은 “환경정화활동과 ‘일몰 후 배출제 및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홍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통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통장들이 솔선수범하여 쾌적한 동네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옥기 기자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 ‘합의’

전주시 · 민노총 등 4개 운영사 노 · 사 · 당 · 정 공동합의문 발표

전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전북본부, 태영건설 등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4개 운영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정상화를 위해 노사와 당정이 타협과 상호 양보를 통해 극적 타결을 일궈냈다.

전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전북본부, 태영건설 등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4개 운영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김윤덕 국회의원, 이성윤 국회의원(불참·합의문 서명), 정동영 국회의원, 남관우 전주시의장, 사측 대표인 박현호 태영건설 이사와 고광태 성우건설 대표이사, 노조 대표인 이창석 본부장 등은 이날 합의문을 발표하며, 앞으로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공동합의문에 따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4개 운영사는 지난 1월 해직된 노동자 11명을 일괄 채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및 상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 공동합의문에 따라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안전과 환경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전주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고자 채용과 사업장 안전, 노사 상생협력 등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전주시의회는 관련 예산 반영 등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해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의 입장을 밝힌 뒤, 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문의 성실한 이행을 재차 약속했다.

노·사·당·정은 이날 발표된 공동합의사항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각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단을 꾸리고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추석 앞두고 소외 이웃에 온기 전달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지역사회의 온기를 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에 나섰다.

11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진북동주민센터를 찾아 꿈사랑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인 소망의 집, 건강한 가족에 10kg 백미를 6포씩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운영에 대한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금암노인복지관에서도 10kg 백미 18포를 전달하며 시설 이용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전주 모래내시장을 찾아 지역 농·수산품을 구입하며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남관우 의장과 김원주 운영위원장, 박선전, 이보순, 최서연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추석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남 의장은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명절을 맞아 주위를 둘러보는 아름다운 지역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팔복동, 추석맞이 환경정비 나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주민센터(동장 장진영)는 지난 10일 관내 자생단체 회원 및 주민들과 함께 관내 취약지 일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비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대비해 팔복근린상가, 각종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은 생활도로, 주요 취약지 등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자생단체 회원, 인근 주민, 주민센터 직원 등 30여 명이 불법투기 쓰레기 등을 정비하여 깨끗한 팔복동이 되게끔 노력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